## "곧 수확인데"…쌀값 떨어질까 불안한 전남 농심

김민석 총리·김영록 지사, 장흥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찾아 점검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오늘 쌀값 안정·재해인정 촉구 농기계 시위

산지 쌀값(80kg)이 22만원을 넘어섰음에도, 가을 수확을 앞둔 농민들 표정은 밝지 않다.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농기계를 끌고 나와 아스팔트 시위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 깨씨무늬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조사도 늦어지면서 무턱대고추수에 나설 수 없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 남연맹은 10일 오전 10시 무안군 남악읍 농협중앙 회 전남본부 앞에서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수확기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 정할 것을 촉구하는 농기계 대행진 행사를 연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행사에 트랙터 10 여대와 트럭 100대를 동원하고 정부의 조속한 재해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깨씨무늬 피해를 입은 벼 소 각 행사도 진행한다.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서는 농자재값 비용 상승,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하면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는데, 쌀값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 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가 쌀값을 떨어트 리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농협이 최근 광주·전남지

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추석 이후 본격 수확·출하할 중만생종 벼 선지급금 명목으로 시세에한 참 못 미치는 6만원대(40kg 조곡벼 기준) 수준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며고 있다.

선지급금은 연말에 결정되는 벼 매입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낮게 형성되면 산지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벼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산지쌀값을 조곡(벼)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현재 산지쌀값은 22만 8616원(80kg·9월 25일 기준)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5년 이후 가장 높다. 농민들은 수확기 쌀값도 이같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물가 부담 등을 우려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수급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 3만 t을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로 '방출'한 것은 시장에 '쌀값을 떨어트리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농민들 우려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예측 실패의 책임을 애 먼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일 오후 벼 깨씨무늬병 피해지역인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 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매년 쌀 생산량과 수요량을 추정한 뒤 수급 안정 대책을 세우고 격리물량을 책정해야 하는 정부 스 스로 예측을 잘못한 탓에 유통·가공업체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혼란을 부추겨놓고 쌀 값 상승의 책임을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에게 지우 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깨씨무늬병 피해를 조속히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깨씨무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과 양분 부족 등으로 벼의 잎, 줄기 등 에 흑갈색의 깨씨같은 무늬가 생겨 등숙 불량과 생 산량 감소를 유발한다.

전남도 자체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깨씨 무늬병 발생 면적은 1만ha(잠정) 규모로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2.8배, 평년보다 2.3배 늘었다. 전남 피해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피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추수에 나 설 수 없는 농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농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 태 조사 전 수확에 들어갈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려워 복구비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 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대 피해 지역을 둘러봤고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들어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 업재해로 인정해줄 것과 복구비 지원,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형대(진보·장흥1) 전남도의원은 "현재 산지쌀 값은 지난 2018년 정부의 쌀목표가격 21만 4000원을 7년 만에야 달성한 것"이라며 "수십년 간 생산비등의 상승에도 제자리를 맴돌았던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대신, 농촌과 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5극3특' 첫 실천모델…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 착수

'규약안' 행정예고 올해 출범 목표···산업·교통·관광 분야 10개 과제 명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을 자임하며 광주·전남 특별지 방자치단체 출범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최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방 주도의 초광역 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연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첫 공식 관문이다.

지난 8월 비전 선포와 9월 추진단 구성에 이은 실행 국면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9월 30일 확정 한 '5극3특 전략'에 호응해 광주·전남이 국가균형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규약안에는 연합의 설립 목적, 구성과 운영 구조, 재정 체계가 뼈대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시·도민 체감도가 높은 공동사무를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의 세 축으로 묶고,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와 초광역 R&D 혁신, 도로·철도·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교통망 구축과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 문화 지원,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명시했다. 양 시·도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

등 다섯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세 특별자 치도를 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재편 방향을 제 시한 바 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이 틀 안에서 호남권 의 성장 거점 역할을 맡아 산업·교통·문화 프로젝 트를 묶음으로 추진하는 '연합 거버넌스'를 구축 하게 된다.

행정예고는 연휴 기간을 고려해 이메일과 팩스

등 비대면 창구를 통해 상시 의견을 받는다. 이후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출범과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합동 추진 체계를 가동해 초광역 프로젝트의 설계·재원·제도 패키지 를 한꺼번에 묶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도 유관단체 부적절 인사채용 무더기 적발

녹색에너지연구원·중기일자리경제진흥원 등 10건 처분

신규 채용과정에서 당초 채용 공고와 다르게 면접 점수를 산정하는가 하면, 예비합격자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남도 유관단체기관들의 부적정한 인사 채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 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 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채용에 대한 전 수조사를 벌여, 모두 10건을 적발해 9건의 주의, 개선 등 행정상 처분과 1건의 신분상 처분(훈계) 를 요구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경우 면접심사 접수를 부정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직원임용 및 운용지침'에 따르면 면접심사는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채용 공고문에도 이 같이 공지했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위원의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위원의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로인해 채용 공고대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2등으로 합격해야 할 인원이 탈락하고 3등인 차점자가 잘못된 채점 방식으로 2등을 기록, 최종 임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채용공고를 통해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 인원의 1배수라고 공고했지만, 2배수인 예비합격자를 부당하게 최종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또 지난해 7번의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4번의 회의에서 희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명의 정규직과 2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총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이 긴급하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총 12번의 인사위원회를 회의 대신 서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진흥원은 또 이해당사자를 시험위원으로 제적 해야한다는 지침에도 불구, 6건의 계약직 채용 면 접 전형에서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 근무 경험이 있 는 이를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들을 해당 응 시자 평가에서는 제외했지만 타 응시자 평가에는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체육회는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른 결정 기준을 정했고, 합격자 결정 방법이 달라질 경우 인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 공공요금 '전국 최저'

광주는 도시가스 요금(1만1334원·516MJ환산 기준)과 도시철도 기본요금(기본요금 1250원)이 전국 최저인데 반대로 20ℓ쓰레기봉투 값 (740원)은 다소 높았다.

전남은 시내버스 요금(980원)이 전국 최저권인 반면 택시 기본요금(4818원)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 도(익산 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이 주요 공공요 금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타 지역과 뚜렷 한 생활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지자체 지역별 공공요금 7종 편차는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졌다.

광주는 2025년 7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이 1만

1334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도시철도 요금 도 1250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상수도 요 금 역시 1만 26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 로 저렴했다. 반면 쓰레기봉투 요금은 740원으로 전국 15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었다.

전남의 시내버스 요금은 980원, 하수도 요금 6137원, 쓰레기봉투 요금 358원으로 모두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택시 기본요금 4818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었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